"보복성 야당 탄압 우병우 작품"…검찰에 전면전 선언

추미애 대표까지…야권 '편파 기소' 강력 반발

더민주 "검찰개혁 제1과제"…의총 열고 대책특위 구성

국민의당도 "최경환·윤상현·현기환과 다른 잣대" 격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필두로 소속 의원들이 줄줄이 기소를 당하자 "노골적인 야당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등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위축시키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의도가 있지 않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더민주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을 잇달아 열고 당내 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 개혁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조차 기소한 걸 보면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 검찰로 막가기로 한 모양"이라며 "검찰 개혁이 국정의 제1과제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제1야당의 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그리고 4선급 중진들을 이렇게 무더기로 기소한 사례가 없다"며 "여러 군데 탐문한 결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작품이라는 것이 중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오영훈 의원의 경우 5개월 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아무 조치가 없다가 어제 갑자기 기소됐다"며 "명백한 보복 기소"라고 말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경우 예비후보자에게 지역구를 변경하라고 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전형적인 야당의 겁박 기소"라고 질타했다.

더민주는 즉각 법조인 출신인 전해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선실세·국정농단·편파기소 대책위원회' 설치하는 한편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 여당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또 더민주는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에서 "박근혜 정권이 제1야당 대표를 표적기소하고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지도부를 무더기로 기소했다"며 "87년 이후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위기를 야당 탄압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도록 검찰 개혁을 위해 당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민주의 반발에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이 아직도 고리타분한 군사독재 시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새누리당 간부와 청와대 출신에 대해서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임에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야당에 적용하는 잣대는 엄중했다"고 꼬집었다.

손금주 대변인도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무뎌지고 야당 대표에게는 묻지마식의 기소를 하는 검찰에 국민들은 한없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권이 이번 기소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생떼"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법 절차에 따라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성실하게 법 집행에 임하겠다"며 "야당은 지도부와 중진 다수가 기소됐다면 국민께 먼저 사죄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추 대표 등 더민주 의원 무더기 기소와 관련해 야당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與 개헌론은 최순실·우병우 의혹 흐리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새누리당 내부에서 개헌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정국의 초점을 흐려서 최순실씨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에 대한 초점을 흐리려는 공작정치"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왜 지금 이 판국에 뜬금없이 개헌 논의인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개헌론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친박의 집권이 어려워지니 이원집정제 또는 분권형(대통령제)을 제시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친박 인사를 총리로 삼는 것을 계산할지도 모르지만 박 대통령의 반대 등으로 시기적으로 실기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회의 이후, 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게 해서 새 대통령 취임 초 개헌을 추진하면 된다"면서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 개헌을 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데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감현장

국회는 13일 기획재정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사실상의 국감 종료를 하루 앞두고 대부분 상임위가 종합감사에 착수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감이 막판으로 접어들수록 정권실세 개입 논란과 맞물린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미르·K 재단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체 공방

◇교문위=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 특혜의혹과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미르재단과 관련해 문화부에 각종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문화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자료제출 부족을 질타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도 "지금 전경련에서도 두 재단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합해 하나로 다시 만들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과연 전경련이 통합을 시킬 주체가 될 수는 있느냐"고 추궁했다. 또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로 한 예술인 명단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배제의 대상이 되는 예술인들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미르재단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데 문화부는 당시 보도자료도 내고 다 하지 않았나"라며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숨기려고만 하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치가 계속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도 격해졌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질의 도중 야당 의원들이 웃음을 보이자 "왜 다른 의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비웃느냐.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말했고, 더민주 유은혜 의원은 이를 듣고는 "무슨 소리냐. 정식으로 사과하시라"고 요구했다.

결국, 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과했지만, 유 의원은 한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북한 선제타격론 논란에 새누리 퇴장

◇외통위=이날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일본군 위안부합의 등에 대한 더민주 소속인 심재권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했다.

심 위원장이 국감을 개시하면서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 선제타격론에 대해서도 "한민족 전체의 대재앙"이라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미국의 영변 폭격 시도를 단호히 막았듯이 미국 조야에 확고한 전쟁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으로 편파적 회의 진행이라면서 제동을 걸며 심 위원장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특히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이런 문제로 위원장이 중립을 지켜야지 도대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야당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이에 더민주 설훈 의원은 "그 말 취소하세요. 양심이 없다니"라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심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관 현안에 대해 피력할 수 있는 견해를 적절히 피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문제 제기가 있으니) 살펴보겠다"고 진정에 나섰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 약 40분 만에 집단 퇴장했다. 심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퇴장 이후에도 회의를 진행하다 오전 10시56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불안감 커가는 원전"…원안위 역할 부족 질타

◇미방위=이날 국감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까지 1조1000억원을 들여 안전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게 6건이나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변재일 의원은 "원안위가 안전이 아니라 원전 발전이나 산업 진흥을 위해 요건만 구비해놓은 채 면죄부를 주는 기관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면서 "사후규제적인 성격에 머물지 말고 선제적·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